

민주 “정부, 초부자감세 철회...이태원 참사 국조 협조해야”

예산안 처리 지연 두고 “초부자감세 철회해야” “국토균형발전 위해 세종 실질 수도 역할해야” 尹 ‘문재인 케어’ 폐기에 “각자도생하라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과 ‘문재인 케어’ 사실상 폐기 등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을 지적하며 국정조사에 하루빨리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더 큰 고통을 부담하는 다수 약자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기업과 수백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 특권 감세를 하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초부자감세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지 예산을 많이 쓰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며

“MB 정권의 초부자감세를 흉내내기 하는 윤석열 정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부”라고 말했다.

세종시장 위원장인 홍성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토 균형개발을 오히려 축소하고 수도권 지원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과밀 때문에, 지방은 지역소멸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함께 지속적으로 10여년간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세종시가 출범했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서 더 이상 국토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

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 폐기는) 각자도생하라는 거다.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쥐고 노동 시간을 늘리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윤 대통령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씨 자산) 현재는 70억이 넘는 거 같은데, 60억 넘는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원대였다. 이렇게 엄청난 부부를 본 적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태도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며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 3당은 즉각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압박을 이



어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유가족 협의회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두고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다. (해당 발언이) 윤 대통령의 뜻인지 묻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장 큰 망발은 진상을 가리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판단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말”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도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고등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망언을 자주 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며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반드시 민주당의 힘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풀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성동·장제원 의원의 망언이 김미나 창원시 의원의 망언을 부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실에 반성에 입각해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게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민주,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에 “각자도생하라는 것”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시키겠다는 선언” “전 정부 정책이란 이유로 폐기, 참담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며 본격적인 개편을 지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진 윤 대

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해쳤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는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정부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참담한 뿐”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마저 국민에게 떠넘기는 민폐 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선부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더하러다가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재한기자

‘역대 대통령 초상화’ 용산으로 이사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걸려있던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왔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상화까지 안전하게 이사를 마쳤다.

13일 대통령실은 2층 국무회의실 입구에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렸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에서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래 이 초상화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세종실 전실에 걸려있었다. 그러나 용산은 국무회의실의 전실이 따로 마련돼 있기 않기 때문에 회의장 입구 복도에 초상화를 배치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초상화는 이들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계획 된다.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았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작가협회에서 추천한 화가를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 그리는 방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청년 화가 김형주씨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마지막 국무회의가 진행되던 지난 5월3일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8년 2월19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구 화백이 그린 초상화를 공개한 바 있다.

바뀐 건 역대 대통령 초상화 계획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120대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긴 현황판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